민주 심장서 민주 때리기 … 안철수 '광주 大戰' 방아쇠 당겼다

안철수 '새정추' 광주서 신당 설명회
'지역주의 안주' '혁신 거부' 신랄 비판
"한국정치 바꾸게 호남이 도와달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6일 민주당의 텃밭이자 본거지인 광주를 찾아 민주당에 대한 강도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안 의원은 이날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이하 새정추)의 광주 설명회에서 '지역주의 안주' '혁신 거부' '기득권 유지'라는 단어를 써가며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한국 정치 전체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남 지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안 의원이 이날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은 최근 민주당이 신당 창당 추진을 '야권 분열'로 몰아가는데 대한 불쾌한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야권 성향이 강한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주도권 경쟁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의 이날 호남 방문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후 처음이었다.

신당에 대한 호남의 기대치를 보여주듯 안 의원 일행이 KTX 광주 송정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지자 40여명이 역에 나와 일행을 기다렸고, 설명회가 열린 상무지구 NGO센터 사무실은 지지자 300여명이 몰려 북적거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안 의원을 비롯한 김효석·박호군·윤장현·이계안 공동위원장이 참석해 민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광주 방문에는 앞선 두 차례 전국 투어에 참여하지 않았던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소장을 맡고 있는 장하성 교수가 동행했다. 장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광주 동행에 눈길을 끌었다.

'새정추'는 이날 설명회에서 '호남 민심'이 곧 새 정치를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민주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함께 높였다.

이는 새정추가 신당 창당에 앞서 야권의 심장부이자,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민주당과의 사실상 주도권 경쟁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광주가 전통적으로 야당 표심의 향배를 좌우한 풍향계 역할을 해옴에 따라 야권 내 주도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민심 잡기에 안간힘을 썼다.

새정추는 이날 설명회에서 그동안 호남에서 '자동 선택'을 받은 민주당이 기존 정치구도에 매몰돼 민심 대변 역할에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하며 대안 세력으로서 새정추의 역할을 부각하는 전략을 썼다.

안 의원은 "호남과 영남 두 지역은 정당에서 후보를 정하면 그 후보는 투표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통과됐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권 박탈과 같다"며 "그런 것도 구(舊) 체제라 규정하고 그것이 제대로 바뀌어야 우리 한국이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호남에서의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를 비난했다.

이계안 위원장도 "2등 기업이 가진 가장 좋은 점은 스스로 혁신하면 1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이 잘못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이 스스로 혁신해서 제1당이 될 수 있을 만큼 국민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민주당을 지적했다.

김효석 위원장은 "광주에서 바람이 불면 영남이 변하고 충청이 변한다. 이런 바람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장현 위원장은 "국민은 정치를 존경하지 못하고, 사익집단으로 보거나 웃음거리로 보고 있다. 국민은 해야할 일을 똑바로 하는 정치를 원하고, 자기들끼리만이 아닌 다함께 제대로 굴러가는 것을 원한다"며 "정치가 바뀌면 대한민국 삶이 바뀌는데, 그것에 새정추가 앞장서겠다"고 새정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근 안철수 신당으로의 합류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전·현직 광주지역 지방의원들도 일부 참석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김효석 위원장은 "지방선거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서부터 희망을 이야기하고 새정치의 씨앗을 뿌려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새 정치에 맞는 시대정신에 투철하고, 어젠다를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광주설명회가 26일 광주 서구 치평동 NGO센터에서 열렸다. 안 의원과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역단체장 17명 중 12명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찬성

홍준표 경남지사 반대
4명은 입장 표명 유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17명 중 12명이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은 26일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광역자치단체장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유일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4명은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가운데 새누리당도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단체장들은 그 이유로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논리에 좌우되고 있다"(이시종 충북지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박맹우 울산시장), "중앙정치 개입으로 지역사회가 분열하는 요인이 된다"(최문순 강원지사), "애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김완주 전북지사)는 점을 들었다.

또 "지방정치의 중앙정치화에 따른 지방자치제의 본질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박원순 서울시장), "여야의 공약이기 때문"(강운태 광주시장) 등의 의견도 내놓았다.

다만 박준영 전남지사는 "여건상 기초단체장은 공천제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초의원이라도 무공천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당공천 폐지 의견을 밝히면서도 먼저 국민 여론을 수렴할 것을 강조했다.

반면 홍준표 경남지사는 "기초단체장 공천이 폐지되면 금권선거가 난무하고 공천 없이 선출된 단체장 절반이 구속될 것이다"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운태 광주시장, 유한식 세종시장 등 8명이 직접적 또는 우회적으로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우근민 제주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등 4명은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격분한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연대 않겠다"

민주당은 26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광주에서 첫 신당 설명회를 열자, 긴장감 속에 견제감을 나타내며 수성 의지를 다졌다.

대선 패배 후 좀처럼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안철수 신당'에 '텃밭'까지 잠식당할 경우 야권의 맹주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 예산안을 다루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추미애 의원,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 민주당 소속 의원과 지자체장들이 공교롭게도 안 의원의 광주 설명회와 비슷한 시간에 잇따라 개최한 호남 지역 행사들도 '안철수 신당'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남도당위원장인 이윤석 의원은 이날 "안 의원의 행보는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구태정치"라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버림받은 인사들로 어떻게 새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안 의원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기춘 사무총장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과 선거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지금 인사들로 새정치를 한다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나"라며 본격 선거과정에서 인기가 가라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4선의 중진 김영환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지방선거에서 대패하고 호남 지지를 잃어버리고 국민 지지율이 지금같이 답보한다면 당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안철수 신당에 밀리는 상황은 김한길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정개특위 "정당공천 폐지" "실효성 없다" 주장 엇갈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가 26일 기초단체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 활동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제점이 보완될 때까지 정당공천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당공천의 폐지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점진적인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음 교수는 현재의 정당공천 시스템이 문제가 많은 만큼 제대로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기초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 유예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송인준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당공천을 금지해도 후보자가 정당 지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정당공천 폐지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초의원 출신인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후보자가 난립해 검증도 어렵다",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의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정당이 배제되면 각종 시민단체나 노동자단체 등 유사 정당이 엄청나게 등장할 것"이라면서 부작용을 우려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정치의 핵심은 정당에 있는데 정당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수용하지 못한 대한 반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각 선택권이 갖는 장단점을 어떻게 정치발전을 위해 녹여내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